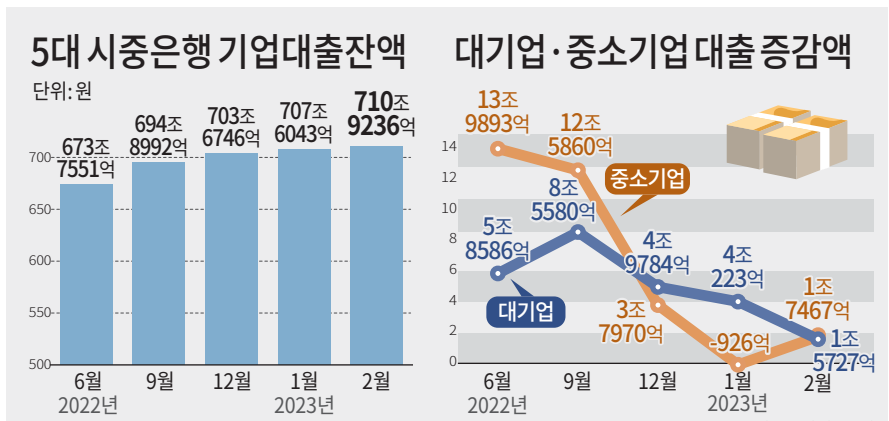
시중은행, 대기업 위주 대출 공급… 中企 자금조달 비상

KB국민 등 5대은행 기업대출 잔액 710.9조로 가계대출 잔액 넘어서

대기업대출 잔액 5.3% 늘었지만 중소기업 잔액은 0.27% 증가 그쳐 "中企 부실증가에 대출증가 감소"



자료/5대 시중은행

주요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이 710조원을 넘어섰지만 상대적으로 우량한 기업을 위주로 대출을 공급하면서,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채권시장에서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질 전망이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710조9236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잔액(685조4506억원)을 넘어선 수준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올해 2개월 간 기업대출은 7조2489억원 증가한 반면 가계대출은 7조829억원 감소했다. 금리인상과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가계대출 감소세가 이어지자,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공급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늘어나는 기업대출이 주로 대기업을 향하고 있다는 것.

기업대출 중 대기업대출 잔액은 111조558억원으로 지난해 말(105조4609억원)과 비교해 5.3% 증가했다. 1월 대기업대출은 전달보다 4조223억원, 2월 1조5726억원 늘었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599조8678억원으로 같은 기간 0.27% 증가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1년마다 신용도를 체크해 연장여부를 결정하는데, 미달된 기업들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서 대출을 갚는 경우가 많았다"며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들의 부실이 증가해 대출 증가액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기업대출 연체율은 0.29%로 전월말 대비 0.03%포인트(p) 올랐다. 중소기업의 경우 연체율이 0.04%p 상승한 0.34%를 기록했다. 대출부실이 금융권으로 전이될 수 있는 만큼 건전성 관리를 위해 중소기업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 경우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은 한계기업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를 넘고, 국내 주요 국고채 금리는 4%에 육박해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회사채에 대한 매력이 감소하고 있다.

지난 1월 신용등급 BBB 이하 등급 회사채 미매각률은 52.5%에 달해 절반을 넘는 수준까지 올랐다.

정혜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채권시장 대기자금이 확대됐지만 연초만큼의 강한 유입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확언할 수 없다"면서 "국내외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고, 국채 금리 변동성이 높기때문에 기업 실적 저하에 따른 등급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A급 이하 비우량물에 대한 투자는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회사채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비우량 기업들의 은행 대출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증가할 수 있다.

박찬우 KDB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면서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되면서 중소기업대출 증가액은 (대기업대출 증가액 보다) 더욱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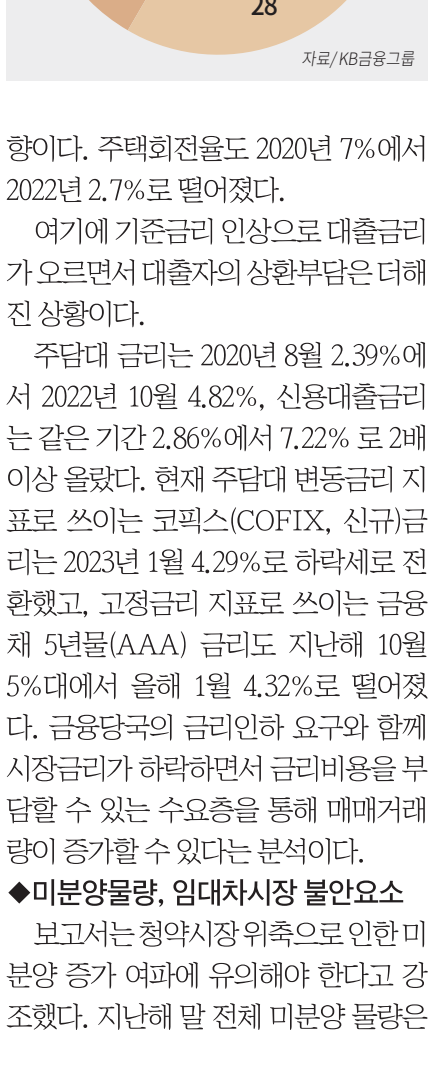
전문가 10명 중 6명 "내년 주택가격 반등"

2023 KB 부동산 보고서

부동산 업계 종사자·전문가 90% "올 주택값 하락… 최대 5% 이상"

2020년 주택 매매량 128만호 기록 작년 51만호로 급감… 회전율 2.7%

청약 위축 '미분양 증가 여파'에 자금지원 금융권 리스크 확대 우려



자료/KB금융그룹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업계 종사자와 전문가 10명 중 6명은 내년부터 주택가격이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 10명 중 9명은 올해 집값이 5% 안팎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자산가들은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임대수익이 기대되는 상가 및 오피스텔보다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5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내놓은 '2023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업계 종사자와 전문가 90%는 올해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격하락폭은 전문가와 프라이빗뱅커(PB)는 3~5%, 중개업소는 5% 이상으로 예상했다.

반면 이들 중 50~60%는 내년 주택시장이 반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수도권은 56%, 5개광역시와 기타지방은 47~48%다. 늦어도 2025년에는 주택시장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규제완화…거래량 회복가능성 ↑

보고서는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부동산 매매거래 추이▲금리 변화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완화 여파 ▲아파트재건축 영향 ▲청약수요 ▲임차시장 ▲주택시장 정책방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 2020년 역대 최대치인 128만호를 기록한 이후, 2022년 약 51만호로 급감했다. 금리인상과 대출규제가 강화되며 수요가 감소한 영향이다. 주택회전율도 2020년 7%에서 2022년 2.7%로 떨어졌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자의 상환부담은 더해진 상황이다.

주담대 금리는 2020년 8월 2.39%에서 2022년 10월 4.82%, 신용대출금리는 같은 기간 2.86%에서 7.22% 로 2배 이상 올랐다. 현재 주담대 변동금리 지표로 쓰이는 코픽스(COFIX, 신규)금리는 2023년 1월 4.29%로 하락세로 전환했고, 고정금리 지표로 쓰이는 금융채 5년물(AAA) 금리도 지난해 10월 5%대에서 올해 1월 4.32%로 떨어졌다. 금융당국의 금리인하 요구와 함께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금리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수요층을 통해 매매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분양물량, 임대차시장 불안요소

보고서는 청약시장 위축으로 인한 미분양 증가 여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전체 미분양 물량은 약 6만8000호로, 이 중 82%가 비수도권 지역인 대구와 경북에 집중돼 있다. 미분양 물량은 1990년대 주택건설 200만호공급 직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글로벌금융위기 때 10만호를 상회하며 크게 증가했다. 2023년 신규분양물량은 약 28만호로, 미분양이 연간 3~4만호 늘어나 총 10만호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면 건설사의 자금난이 본격화하면서 자금을 지원한 금융권으로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 지난해 9월기준 금융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잔액은 약 116조6000억원으로 연 평균 15% 증가했다. 금융위기 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상당수가 은행과 저축은행에 몰려있었다면, 이번에는 보험사와 여신전문금융사가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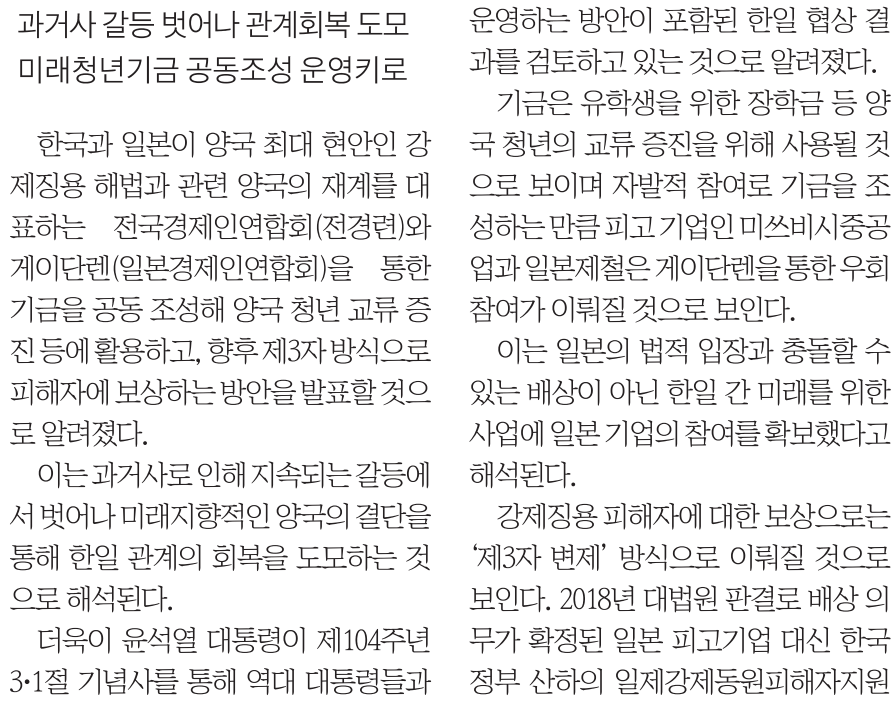
임대차시장의 불안요소도 해소해야 할 과제다. 지난해 하반기 전세대출 금리가 6%에 이르자 전세수요는 감소하고, 월세수요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월세가격은 전년 대비 7.5% 올랐다. 금리 상승과 월세 전환 증가는 임대차 시장의 주요 수요층인 청년과 신혼부부, 소득이 낮은 고령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투자 유망 부동산, 재건축·신축아파트

고액자산가들이 선호하는 투자자산 1위는 여전히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예금(28%), 3위 채권(17%) 순이다.

선호하는 부동산 자산은 아파트(일반아파트+재건축)로 지난해 40%에서 49%로 9%포인트(p) 상승했다. 임대수익이 기대되는 상가 및 오피스빌딩은 같은기간 55%에서 44%로 11%p 줄었다. 경기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임대수익이 기대되는 상가 및 오피스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관심은 감소한 반면 가격이 하락하면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나유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현지시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강제징용 피해보상 '제3자 변제방식' 가닥

전경련-게이단렌 합작
과거사 갈등 벗어나 관계회복 도모
미래청년기금 공동조성 운영키로

한국과 일본이 양국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 양국의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게이단렌(일본경제인연합회)을 통한 기금을 공동 조성해 양국 청년 교류 증진 등에 활용하고, 향후 제3자 방식으로 피해자에 보상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과거사로 인해 지속되는 갈등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양국의 결단을 통해 한일 관계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104주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였지만, 이제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면서 함께할 미래를 강조한 점도 이번 발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5일 정부 소식통과 일본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최근 한일 외교당국간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주무 부처인 외교부가 6일 해법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가 뒤이어 과거 반성이 담긴 담화를 계승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양국은 전경련과 게이단렌을 통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된 한일 협상 결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은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등 양국 청년의 교류 증진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보이며 자발적 참여로 기금을 조성하는 만큼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은 게이단렌을 통한 우회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의 법적 입장과 충돌할 수 있는 배상이 아닌 한일 간 미래를 위한 사업에 일본 기업의 참여를 확보했다고 해석된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으로는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 피고기업 대신 한국정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이 거론돼왔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방안에 발맞춰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밝힌 기존의 일본 정부 입장을 계승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정부는 1998년 이른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